"AI 선택 아닌 필수"… 교육부, 대학생 AI 기본교육과정 추진

교육부, 전공 상관없이 역량 교육
수도권 6개교 등 총 20개교 선정
2년간 매년 학교당 3억 이내 지원

교육부 전경.

덕성여자대학교와 세종대, 한국외대 등 수도권 6개 대학이 교육부 지원을 받아 모든 대학생이 인공지능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에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인공지능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전공이나 지역 등 여건에 따른 대학 간 인공지능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가 별도 지원하는 거점국립대 9개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해 지원할 예정인 인공지능 중심대학 10개교를 제외한 대학 가운데 20개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수도권 선정 대학은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여대, 세종대, 용인대, 한국외대 등 6개교다. 비수도권 선정 대학은 건국대(GLOCAL), 경운대, 국립경국대, 국립한밭대, 동국대(WISE), 동명대, 동신대, 동의대, 부산외대, 송원대, 순천향대, 전주대, 창신대, 한라대 등 14개교다.

2026년 신규 선정 공모에는 총 80개교가 지원했다. 교육부는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쳐 수도권 6개교, 비수도권 14개교 등 총 20개교를 선정했다. 평가는 ▲인공지능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의 적절성 ▲교수자 인공지능 역량 강화 전략 ▲교육과정 공유·성과 확산 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2026년 인공지능 중심대학 선정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최종 20개교를 확정하고, 선정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개교 외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3개교를 예비선정했다. 선정된 20개교 가운데 2026년 인공지능 중심대학으로 확인되는 대학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비선정 대학 가운데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학은 향후 2년간(1+1) 매년 학교당 3억원 이내의 재정을 지원받는다. 사업 기간 중에는 연장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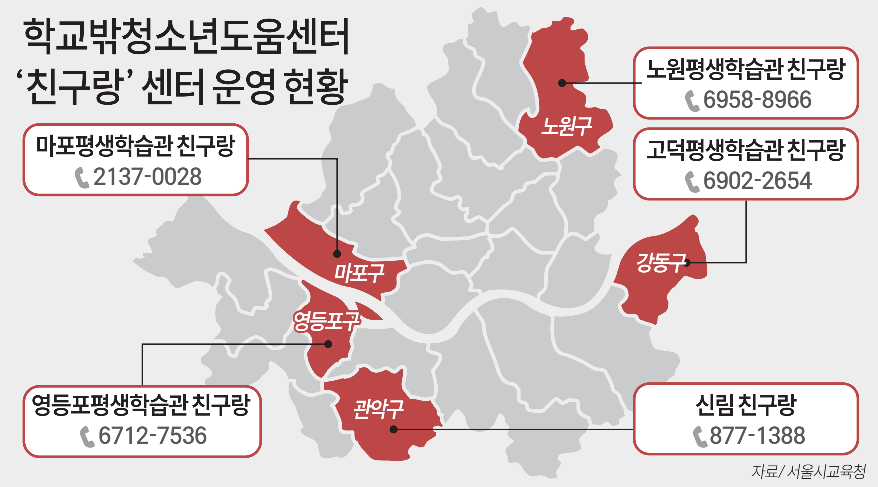
선정 대학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비판적 사고 등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기초 교양 교과'와 인공지능을 비공학계열 전공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활용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발·운영하게 된다. 또 학습자에게 양질의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수자 역량 강화와 관리 체계 구축도 병행 추진한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타 대학과 공유해 대학 현장 전반에 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보편화하고, 지역 간 인공지능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대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인공지능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심리상담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늘린다

서울시교육청 '종합 지원 계획'
도움센터 '친구랑' 5곳 직영 운영
멘토링·고위험군 상담 최대 24회



자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1대1 학습 멘토링과 고위험군 심리상담을 확대하고, 교육참여활동비 지원을 이어가는 조합 지원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 발굴 및 운영 ▲1대1 학습 멘토링 ▲전문기관 연계 심리·정서 지원 확대 ▲교육참여활동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안정적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5개 센터를 직영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자살 고위험군, 우울감, 장기 은둔 등 위기 유형과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새로 발굴해 운영한다. 자살 예방 교육과 은둔형 외톨이 예방 교육 등 위기 예방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학습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기초 학습과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1대1 학습 멘토링을 운영한다.

심리·정서 지원 역시 늘린다.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은 기존 12회에서 자살·자해 등 고위험군의 경우 최대 24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월 20만원의 교육참여활동비 지원도 이어간다. 초등학생은 1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을 지원하며, 매월 6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지급된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취약계층에 최대 55만원 고유가 피해지원

차상위계층 등 27일부터 1차 신청

서울시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5월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1차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2차 지급 대상자(국민의 70%)는 10만원씩 지급된다.

성인(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시에 신청 접수를 마감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다만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에는 신청 창구 혼잡 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한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뿐 아니라 5, 0인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그밖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25일부터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특례시 지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자치권 확대 전환점 기대

고양시가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입법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안 제출 이후 논의가 지연돼 왔으나, 지난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4월 6일 행안위 전체회의, 4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법안에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특히 19건의 신규 사무특례를 비롯해 특례 부여 요청 권한이 명문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정책 추진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권한의 지방 이양이 꼽힌다. 기존에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법안 시행 시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모습.

구리시, 갈매동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경춘선 선로 주변 약 3km 구간

구리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개통 이후 경춘선 선로의 철도 운행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갈매동 일대 경춘선 선로 주변 약 3km 구간이 22일부로 교통소음(철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GTX-B 노선 개통 후 경춘선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 공용 구간이 늘어나면서 열차 운행 빈도가 급증해 철도 소음 피해가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해 왔으며, 갈매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요청이 반영돼 지정이 이뤄졌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철도 소음·진동이 주간 70데시벨(dB), 야간 60데시벨(dB)을 초과하면 관계기관에 방음벽과 방진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시설관리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해 신속한 소음 저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리(경기)=김용택 기자 mk4303@